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제적 반응*

李 甲 允

I. 머리말

II. PKO 법안의 통과와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

III. PKO 파병에 관한 각국의 반응

IV. 결론과 전망

I. 머리말

1992년 6월 15일 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하 PKO 협력법)이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 민사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UN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평화유지활동이 지뢰제거나 선거감시 등과 같은 비군사적 또는 비전투적 평화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거나 일본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그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혹은 내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간에 이번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일본이 그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적 조치라는 점에서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 이 논문은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전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상인국가(a peaceful merchant state)'라고 불리울 만큼 평화주의와 경제주의적 외교정책을 견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국의 안보를 자신의 군사력보다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외교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어떠한 정치-군사적인 국제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개입주의를 고수해왔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정책의 연원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내세운 미군정의 점령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보수본류(保守本流)' 외교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정책은 요시다(吉田茂)와 같은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 지도자에 의해 채택되고, 1960년대의 안보파동과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국민에게 확산됨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²⁾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 아래서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해오던 일본의 '보수본류' 외교정책은 1980년대 이후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그 동안 일본이 안주해오던 전후 미국 해게모니하의 국제 경제질서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와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일본 경제력의 상대적 부상

1) 이와 같은 전후 일본외교의 특질에 관해서는 淺井基文, 『日本外交: 反省と轉換』(岩波書店, 1989); 渡邊昭夫 編, 『講座國際政治 4: 日本の外交』(東京大學出版會, 1989), 특히 제10장; 入江昭, 『日本の外交』(中央公論社, 1966); 五十嵐武士, 『對日講和と冷戰』(東京大學出版會, 1986); 石井修, 『冷戰と日米關係』(ジャパン・タイムズ社, 1989) 등을 참고하라.

2) 이에 관해선 秦郁彦, 『アメリカの對日占領政策』(東洋經濟新報社, 1976); 吉田茂, 『回想十年』(新潮社, 1958); 岸信介, 『岸信介回顧錄』(廣濟堂出版, 1983)을 참조하라.

등으로 인해 구조적 변동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³⁾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전후 미-소 중심의 냉전적 국제 정치질서가 와해되고 탈냉전적 신국제질서로의 재편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미-일 관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국내외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제적 압력으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역할도 증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유지에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압력이 있다. 또한 국내적 압력으로는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으로서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세계 제 2 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나카소네(中曾根康弘)나 오자와(小澤一郎)와 같은 일본 정계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압력을 들 수 있다.⁴⁾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의 분출로 인하여 기존의 '보수본류' 외교정책은 현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결국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도 이러한 외압과 내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편된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은 아

3) 이와 관련하여 길핀은 1970년대 이후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와 '니치베이(日米)' 경제의 증대되는 상호의존성--즉 미국경제와 일본경제의 통합화 경향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금융종속화 현상--을 들고 있다.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ch. 8, 9 참조.

4)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中曾根康弘・佐藤誠一郎・村上泰亮・西部 邁, 『共同研究「冷戦以後」』(文藝春秋, 1992);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1993)을 참조하라.

니다.⁵⁾ 제 2차 세계대전 중 혹은 그 이전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또는 식민지 지배 등과 같은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대다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사실 이들의 존재가 일본이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정적 기여가 절대 불가결하며, 이를 확고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을 격상시켜 줌으로써 일본 스스로 보다 능동적으로 이러한 역할 및 책임의 분담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 견해인 듯하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나라들은 과거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기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서로 상치되는 시각의 착종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미국 및 유럽 각국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조적인 입장을 포함하여,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왜 그러했던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의 분석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

5) 신국제질서하에서의 UN의 역할 및 PKO 기능에 대해선, M. Berdal, *Whither UN Peacekeeping?*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3); 淺井基文, 『新しい世界秩序と國連』(岩波書店, 1991)을 참고하고, 특히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岩波書店編集部 編, 『新しい世界秩序とアジア』(岩波書店, 1991); 坂本義和, 『地球時代に生きる日本: 憲法と國際貢獻』(岩波書店, 1990)을 참고하라. 일본외교에 있어서 대외원조의 기능에 관해서는, Dennis Yasutomo, *The Manner of Giving: Strategic Aid and Japanese Foreign Policy*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6); 松井謙, 『經濟協力--問われる日本の經濟外交--』(有斐閣, 1983)를 참고하라.

아니라, 더 나아가 탈냉전시대의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PKO 법안이 통과되고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되어 PKO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I. PKO 법안의 통과와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

자위대의 UN 평화활동 참여에 관한 논의는 일본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PKO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페르시아만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UN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모색하던 미국은 우방국가들에게 군사적 제재시 필요한 군사적·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25%)이 이 지역의 안정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가이후 정부는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제연합평화협력법안'을 그 해 10월에 중의원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연합평화협력법안의 제출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성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제출 후 일본 정부는 주요한 외교경로를 통해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이해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도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이 불필요하다는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또 국내적으로는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한 자민당으로서는 공명당, 민사당 등 중도정당의 지지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사전협의 없이 자

민당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민사당을 제외한 공명당, 사회당, 공산당 등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게다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한 달 후 정부에 의해 자동폐기되었다.

일본은 페르시아만 전쟁 경비의 약 1/5인 130억 달러를 부담하였으나, 인적 공헌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표외교(小切手外交)' 또는 '땀을 흘리지 않는 외교'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비판은 국내적으로는 일본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심적인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불만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이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 페르시아만 전쟁의 종전 후 자위대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자국의 수송선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페르시아만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해정 4척과 해상자위대원 400명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외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소해정 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된 자민당 정부는 캄보디아 평화유지 활동에 자위대를 참여시키기 위해 1991년 9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한국, 중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을 제외하곤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야자와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공명당이 요구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비롯한 평화유지활동 5원칙과 평화유지군(PKF)활동의 동결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민사당이 요구해 온 국회 사전승인이라는 조건에 대해 양보함으로써 PKO 법안에 대한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⁷⁾ 이러한 과정을

6) 『讀賣新聞』 1991년 4월 25일.

7)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김홍락, "자민당 정부와 PKO 협력법 입법의 정

통해 자민-공명-민사 3당의 합의하에 재수정된 PKO 협력법안은 1992년 6월 9일 새벽에 참의원을 통과하고, 다시 6월 15일 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성립된 PKO 협력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9월 8일 '캄보디아 국제평화협력업무실시계획'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실시계획안은 국제평화협력대원의 현지에서의 업무를 ① 정전감시, ② 문민경찰, ③ 도로 등 시설의 정비를 행하는 후방지원으로 규정하고, 요원 총수는 1,811명으로, 그 업무기간은 1992년 9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약 1년 2개월로 정하고 있다. 파견지역은 '캄보디아'로 명기하고 있지만, UN의 지휘하에 주변국가들에서 보급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지 장비에 대해서도 소형무기, 차량, 보급함, 수송기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고 있다.⁸⁾ 이러한 실시계획에 따라 같은 해 9월 17일 캄보디아 PKO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자위대의 제 1진이 현지로 출발함으로써 전후 최초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실현되기에 이른다.

III. PKO 파병에 관한 각국의 반응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각국의 반응은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이 미국에 의해 요청된 1990년 8월부터 PKO 협력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직후인 1992년 7월경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에 관한 논의, 종전 후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캄보디아 PKO 활동에의 자위대 참여문제에 대한 반

치과정”(본지 게재)을 참고하라.

8) 『讀賣新聞』 1992년 9월 8일.

용 등 세 차례의 계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3 가지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페르시아만 파병, 캄보디아 PKO에의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소해정 파견과 캄보디아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1) 미국 및 EC 국가들 :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는 직후 서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UN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우방국들로부터 재정적·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일본에게 해안봉쇄를 위한 소해정 파견을 비롯해 의료, 수송, 장비 등의 인적·물적인 후방지원을 요구하였다.⁹⁾ 또한 미국은 가이후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평화협력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탈냉전 시대의 집단안보와 평화유지에 일본과 독일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¹⁰⁾ 평화협력법안이 폐기되었을 때, 미국은 법의 개정없이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실망의 뜻을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페르시아만 전쟁에 대한 일본의 참여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정도로 강했을 뿐 아니라 그 통로도 매우 다양한 것이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부통령, 국무성, 국방성, 상·하원의원, 주일 대사관, 더 나아가서는 언론과 여론까지 동원하여 일본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이미 무역갈등을 둘러싸고 미국인 사이에서 증가해오던 반일감정을 더욱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

9) 『讀賣新聞』1990年 9月 1日.

10) 『讀賣新聞』1990年 10月 13日, 10月 23日, 10月 29日.

은 인적공헌이 없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여의 결정에 있어서도 서방 7개국 중 가장 늦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뢰제거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파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은 캄보디아 PKO활동에 관한 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무성은 일본 자위대의 PKO활동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PKO 협력법의 통과는 일본 국내적인 문제로 간섭할 수 없다고 논평을 하였는데,¹¹⁾ 이는 미국이 자위대의 PKO활동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와 비판이 일본 국내여론을 악화시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한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EC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반응은 미국보다 그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전쟁에 대해 일본의 인적공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일본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일의 적극적인 기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UN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한 런던 서방 7개국 회의의 합의사항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C 국가들이 일본의 PKO 활동에 관한 강한 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이 누적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

11) 『조선일보』 1992년 6월 10일.

12) 『讀賣新聞』 1992년 6월 16일.

대한 규모의 외교경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도 만성적인 불황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의 분담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UN 활동을 포함한 구미 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온실 안에서 안주하는 것을 방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EC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비판의 근원은 그것이 국내정치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하에서 혜택만 향유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무임승차국이라고 하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이미 1970년대부터 일본 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과 불공정 무역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책임분담의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근거에는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꾀하는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인적 공헌에 대한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강조는 실제적 필요정보다는 책임부담이라고 하는 당위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증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아시아 주변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군국주의와 같은 팽창주의적 위험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미국 및 EC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도 기인하지만, 이들의 논리에는 7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현재의 구미중심적 국제질서의 유지와 발전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미국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이다.¹³⁾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군비증강이 소련의 붕괴 이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지위 격상에 반대하고, 또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블록화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반자 또는 추종자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며, 미국으로부터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역할의 증대는 결코 아닌 것이다.

(2) 중국과 한국 :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가장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나라는 중국이다. 미-일간에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이 논의된 직후부터 중국정부는 강택민 총서기, 양상곤 주석, 전기침 외상, 주일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일본정부에게 거듭 요청하였다. 종전 후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는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해서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강택민 총서기, 전기침 외상, 이붕 총리 등은 과거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¹⁴⁾ 또한 중국정부는 1992년 1월 중국을 방문한 사회당 위원장에게 캄보디아 파병을 위한 PKO법안에 대해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¹⁵⁾ 같은 해 4월에 일본을 방문한 강택민 총서기는 PKO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위대의 파견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⁶⁾

13) 페르시아만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해도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대폭 증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시아의 미군을 재배치함으로써 탈냉전 시대의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讀賣新聞』 1990년 2월 11일.

14) 『讀賣新聞』 1991년 5월 1일, 5월 2일, 5월 4일.

15) 『讀賣新聞』 1992년 1월 12일.

16) 『讀賣新聞』 1992년 4월 8일.

중국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들 수 있다. 중-일간에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현재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이 교과서 사건, 신사참배, 침략에 관한 망언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이 과거에 중국에게 가했던 피해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쟁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일본의 지도층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국내외적인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한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인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해상 수송로 확보나 UN 평화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태도의 근거로 지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중국과 일본의 필연적인 경쟁관계이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들 양국사이의 정치-군사적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이들이 적대관계로 급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경쟁적 갈등관계가 언젠가 현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80년대 이래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대해 중국이 반대해온 이유도 그것이 비록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왜 좀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중국의 일본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을 지적

하는 주장이 있다.¹⁷⁾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총수출액의 25%를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과 총수출액의 4%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간의 비대칭적인 무역구조가 지적되거나 또는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양국간의 원만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 지나친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사실 중국의 지도층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중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적 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이되기 보다는, 아놀드(W. Arnold)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제적 혜택을 가져왔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¹⁸⁾ 즉 나카소네 정부의 4,700억 엔의 원조와 다케시다 정부의 8,100억 엔의 원조가 모두 교과서 왜곡 사건, 후지오 망언 등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는 용도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정부가 1985년 중-일 합작투자의 바오산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등은 일-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나 원조를 중국이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일본 또한 이를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경비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크게 다

17) 외국투자에 크게 의존하거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는 자본보유국이나 교역상대국의 요구에 순응하게 된다는 '경제적 영향력 효과'를 이론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Albert 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를 들 수 있다.

18) Walter Arnold,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in Japan's Relations with China since 1978," in K. Newland,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Japan* (London: Macmillan, 1990).

르지 않으며, 차이가 있다면 중국보다는 약간 약한 반대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국제연합협력법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하였으나,¹⁹⁾ 페르시아만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였다.²⁰⁾ 1992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일본의 국제적 공헌은 비군사적·경제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²¹⁾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언론과 여론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의 반대의 근거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의 문제이지만 그 비중은 36년간의 식민지 경험을 한 한국의 경우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한국인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인접국이라고 하는 점보다는 과거에 대한 불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의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PKO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로동신문』 기사나 해설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난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역시 과거사 문제이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조-일 국교정상화의 지연'과 관련하여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²²⁾ 또

19) 『讀賣新聞』 1990年 12月 8日.

20) 『讀賣新聞』 1991年 4月 25日.

21) 『讀賣新聞』 1992年 1月 17日.

22) 1992년 6월 10일자 『로동신문』은 일본의 PKO 협력법안의 통과를 보도하면서 해설기사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 정부간의 회담에서 일본측이 과거의 죄악을 똑똑히 인정치 않고 청산도 하지 않으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6월 17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일본이 진실로 국제적 공헌을 하려면 죄악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옹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조-일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만도 공식적인 논평을 별로 하지 않았다.

(3) 동남아 국가들 :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매우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 왔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만 전쟁에의 자위대 파병문제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반대를 나타낸 반면, 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UNTAC)에의 참여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였다.

국제연합평화협력법안이 중의원에 제출된 1990년 10월에 필리핀 정부는 자위대의 중동파견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페르시아만 사태에 즈음한 국제공헌은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²³⁾ 태국은 외상을 통해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견은 용인하겠으나 사전협의를 없었던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²⁴⁾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위대의 페르시아만 파병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²⁵⁾

캄보디아 PKO에의 자위대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상은 이미 일본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참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의도는 이해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²⁶⁾ 필리핀 정부는 자위대의 참가 여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일본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라면 지지한다고 했다.²⁷⁾ 태국과

국교정상화와 과거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3) 『讀賣新聞』 1990年 10月 17日, 10月 22日.

24) 『讀賣新聞』 1990年 10月 22日.

25) 『讀賣新聞』 1990年 10月 27日.

26) 『讀賣新聞』 1991年 5月 22日.

27) 『讀賣新聞』 1991年 3月 6日, 4月 5日, 5月 27日.

말레이시아 수상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자위대 파병을 기대하고 있다는 환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²⁸⁾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당사국인 캄보디아 정부였다. 특히 훈센 수상은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여 자위대 파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자위대 파견을 위한 여론 동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즉 그는 “제 2차 대전은 과거의 일이고, 이번은 UN의 이름 아래서 군사적 공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²⁹⁾ “의료, 수송 등 후방지원분야와 문민경찰 등에서의 공헌이 축적되면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팽창주의 일본으로부터 우호적인 일본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가능할 것”³⁰⁾이라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캄보디아와는 정반대로 싱가포르 정부는 캄보디아 PKO 활동에의 자위대 참가에 대해 일본정부 지도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³¹⁾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는 달리 자위대의 PKO활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험 및 경제적 의존도의 차이이다. 먼저 역사적 경험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도 동북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으나, 당시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이거나 한국인이 느꼈던 정도의 분노를 느끼지 않았으며, 버마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침략이 오히려 유럽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28) 『讀賣新聞』1992年 5月 7日, 5月 12日.

29) 『讀賣新聞』1992年 3月 23日.

30) 『讀賣新聞』1992年 6月 16日.

31) 『讀賣新聞』1992年 6月 16日.

긍정적인 이미지마저 존재한다는 것이다.³²⁾ 둘째로 경제적 의존도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 이래 일본의 경제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왔으며, 그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 국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 국가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일본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에 있었던 이들 지역에서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반일데모의 확산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아세안(ASEAN)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한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최대의 또는 제 2위의 교역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또 이들 국가에게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³³⁾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32) 예컨대 필리핀은 1898년 이래 미국의 식민지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등은 19세기 중반 이래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네시아는 17세기 이래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존재했으며, 그 중 버마는 1943년 일본 군부의 도움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1932년 이래 입헌왕국으로 독립을 유지해오던 태국은 2차 대전시 대일 협력을 함으로써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33) ASEAN 국가들에 대한 ODA 원조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등 ASEAN 국가들이 한국, 대만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데 있어 일본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모형을 택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게 있어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 미국 및 EC에 비해 그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5년에 이르면 대일 수출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ASEAN 3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대일 수출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1970년과 비교해 볼 때 대일 수출의 신장세보다 대미 수출의 신장세가 더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나라가 공업화되어감에 따라 수출품목에서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공업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에 있어서 일본보다 미국이 더 관용적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1988년 ASEAN 국가들의 총수출의 42%가 미국 및 EC 시장으로 수출되고 단지 24%만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ASEAN 국가들과 일본간에 만성적인 무역역조와 일본시장의 개방 문제를 둘러싼 무역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70	1975	1980	1985
일 본	27%	43%	49%	54%
미 국	40%	19%	13%	15%

출전 :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1970-1984.

<표 1> 교역 통계의 방향 1970-1985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미수출		대미수입	
	1970	1985	1970	1985	1970	1985	1970	1985
인도네시아	41%	49%	29%	28%	13%	23%	18%	14%
말레이시아	18	25	17	23	13	13	9	15
필리핀	40	19	31	14	42	36	29	25
싱가폴	8	9	19	15	11	20	11	13
태국	25	13	37	26	14	20	15	11

* 각국의 총수출입액 가운데서 대일·대미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0-1985.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자위대 파병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 변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중-일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영향력이 곧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원조의 원인은 일본이 이들 국가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들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결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지 않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겠다는 후쿠다 독트린은 베트남전쟁 이후 동남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청,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 일본의 동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³⁴⁾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다는

34) Charles E. Morrison, "Japan and the ASEAN Countries: The Evolution of Japan's Regional Role," in T. Inoguchi and D. Okimot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2: The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421-422 참조.

ASEAN을 통해 공동협상하고자 하는 ASEAN 국가들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일본이 원하지 않았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본에 강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정치적 영향력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의 PKO 활동을 지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캄보디아에서 PKO의 정전감시와 선거관리에 의한 새정부 구성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안정을 원하는 이들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국내 정치·경제적 제약 때문에 PKO 활동을 포함한 UN 활동에 대한 기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일본의 참여를 환영했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 모리슨(C. Morrison)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³⁵⁾

IV. 결론과 전망

왜 국가별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데 대한 대답은 궁극적으로 이들 나라들이 자위대의 해외파견,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C 국가들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전통적인 무임승차국의 UN활동에 대한 참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

35) 같은 글, pp.443-445 참조.

국과 중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정치·군사적 대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잠재적 지역패권국가의 세력확장의 일환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ASEAN 등의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이 바라는 지역안정에 대한 일본의 기여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나타나는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역사적·심리적 요인과 구조적·지정학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심리적 요인을 본다면, 미국과 EC 국가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미국 군사력의 보호 아래 신중상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평화주의란 명목으로 국제사회의 공공재 조달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책임분담의 요구에는 매우 인색했던 나라인 반면, 한국 및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있어 일본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인 것이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 일본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은 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적·지정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에 비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앞서 있으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미국과 EC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반면, 일본에 근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크게 떨어진 한국과 중국 등은 일본의 증대되는 정치적·군사적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ASEAN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각 쟁점마다의 각국의 반응을 그 방향과 강도 및 명분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각국의 반응·방향, 강도, 명분

	페만 파병 '90. 9.	소해정 파견 '91. 4.	캄보디아 파병 '92. 6.	명 분
미국	긍정 (강)	긍정 (강)	긍정 (약)	책임분담
EC	긍정 (강)	긍정 (약)	긍정 (약)	책임분담
ASEAN	중립/부정(약)	중립/긍정(약)	긍정(강)	지역안정 기여
중국	부정(강)	부정/중립(약)	부정(강/약)	과거사
한국	부정(강)	중립/긍정(약)	부정(약)	과거사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 기술, 원조 등을 통해 일본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의존 때문에 자위대의 PKO 참여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별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소위 러셋(B. Russett)이 말하고 있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일본이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거의 모든 국가들이 무임승차, 경제적 동물, 팽창주의 등으로 일본의 현재와 과거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자라고 느끼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이 일반적 통념보다 적은 영향력만을 갖게 되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경제력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과거의 영국이나 전후의 미국과 같은

36) Bruce Russett, "U.S. Hegemony: Gone or Merely Diminished, and How Does It Matter?," in T. Inoguchi and D. Okimot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2: The Changing International Contex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101-103 참조.

패권국가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자본과 시장을 동시에 제공해 줌으로써 패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일본은 자본만 제공하고 시장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영향력의 자원으로서의 경제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지금까지 주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의 차이를 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차이가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국가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탈냉전 시대의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구소련 및 동구권,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이 탈냉전 시대에서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통제하에 존재하면서 미국 주도의 신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 협조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는 앞으로 일본 외교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구조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국제공헌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내정치에 있어서 불과 2년 사이에 3번의 정권이 바뀌는 정당정치의 불안정을 가져온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목표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37) 코헨은 헤게모니 국가는 “천연자원, 자본의 원천, 시장, 그리고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비교우위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32.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구조적·원천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자국 시장개방에 있어서의 일본의 소극적 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을 무역수지차국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이나 다케무라의 '작은국가론'과 같은 대안들에 대한 일본 국내의 호응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는 보수본류 노선의 평화적 상인국가가 지금까지 일본에게 효율적인 안보와 막강한 국부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변화 그 자체가 별로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날 일본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신중상주의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본에게 국제화와 시장자유화에 따른 개방정책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일본 지도층의 신보수주의적 경향과 지금까지의 보수본류 정책이 가져다 주는 혜택에 안주하려고 하는 일본 국민들의 풀뿌리 보수주의적 성향간의 갈등 또한 향후 일본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